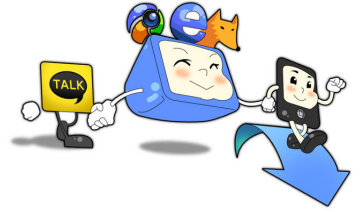


성명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 국회 담당
- 발 신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국회의원 최재천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2-723-5303
- 일 자 : 2012. 11. 29(목)
- 제 목 :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 (총2장)

사회적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주요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 토론회 당일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 역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한된 논의에 머무른 바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¹⁾

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불공정행위인 무선 인터넷전화차단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허용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애매 모호한 다량 이용자에 대한 제한이나, 이용자의 동의를 이유로 한 트래픽차단 역시 이용자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트래픽관리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투명성(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트래픽 가이드라인의 규정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내용상으로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방통위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트래픽관리기준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최재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1) 가. 미국 FCC 망중립성 논의 자료 모두 공개 <http://www.fcc.gov/topic/open-internet#rules>
나. 유럽 연합 BEREC(전자통신규제기관) 망중립성 논의 자료 모두 초안단계부터 온라인 공개 http://berec.europa.eu/eng/news_consultations/Closed_Public_Consultations/
다. 캐나다 DPI 논의 과정 모두 공개 <http://dpi.priv.gc.ca/>